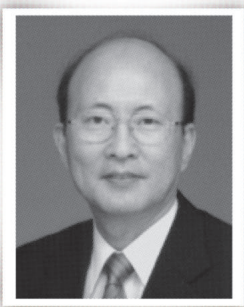


# 남북 수용가능 시나리오 마련 정책적 식품산업 육성 · 국제경쟁력 키워야

'통일' 우리 민족이 당면한 숙명적 과제임에도 자세 준비는 너무 안이 · 무계획적  
합리적 식량영양 최적화모델 수립, 건강 · 경제적 식품공급 및 소비 이루어지도록 해야



이철호 이사장  
한국식량안보연구재단

## 서론

통일은 우리 민족이 당면한 숙명적 과제인데도 우리의 자세와 준비는 너무 안이하고 무계획적이다. 더구나 남한사회가 주도하는 통일이 되려면 엄청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한데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다. 넥스트 디케이드의 저자 조지 프리드만(George Friedmann)을 비롯한 많은 지정학자들이 북한의 붕괴를 예측하고 남한으로의 흡수 통일을 당연시 하지만 현장에서 보는 통일 여건은 그리 낙관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조선혁명은 남한의 혁명세력이 주체가 되어 수행해야 한다'는 북한의 민족해방인민 민주주의 혁명 전략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남한의 국론은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무력화 되었으며 중북세력들이 국회와 사회조직에 대거 진출하여 있다. 북한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약점을 파고들어 남한 내부에서 인민혁명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위기를 제대로 관리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남한은 커다란 재앙을 맞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남한이 해야 할 일은 북한주민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유 민주통일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자유경제체제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며 GDP 2만달러를 넘는 풍요사회를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북한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다. 오히려 경제수준의 큰 차이는 새터민들이 느끼는 것처럼 이질감과 좌절감을 크게 할 뿐만 아니라, 통일이 되면 남한의 거대 자본들이 들어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빼앗을 것을 염려하게 한다. 그러므로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려면 남북한 주민들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통일 시나리오를 마련해야 한다.

남한 주도의 통일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남한사회가 북한주민이 함께 살고 싶은 정의롭고 정직하고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어야 한다. 북한에서 돌발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북한지역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원하는 합리적인 방안들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국유화 되어 있는 북한의 토지와 부동산을 북한주민에게 배분하는 원칙이 세워져야 한다. 통일 후 남한의 자본이 북한에 무차별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이 만들어 져야 한다. 북한의 시급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통일 시나리오를 보고 북한주민들이 통일을 선택하게 해야 한다.

통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치 상태에서 드는 사회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있다. 그러므로 통일은 분단 60여년 동안의 체제 경쟁에서 양 진영에 쌓인 불합리와 폐단을 최소화하여 이상적인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남한은 식품의 과소비와 비만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반면 북한은 기아와 부족한 의료 서비스로 인해 폐결핵 환자가 인구 10만명당 300명을 크게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남북한의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일이야말로 통일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식품 과소비와 식량 낭비를 줄여 식량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북한의 식량생산을 늘려 북한 주민의 굶주림과 식량 부족을 해소하는 노력이 시급히 전개되어야 한다. 한국인을 위한 합리적인 식량 영양 최적화 모델을 수립하여 건강하고 경제적인 식품 공급

및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을 대비한 우리나라 식량안보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아본다.



## 통일을 대비한 식량안보 정책

### ● 쌀 120만톤 비축제도 법제화

한반도 통일 시점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양곡의 양은 170-250만톤으로 추정된다(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3 참조). 즉, 통일을 대비하여 이 예상 부족양곡을 항시 비축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 주민에게 남한이 보여줄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의 기초가 된다. 남한이 북한 주민들을 위해 식량을 준비해 두고 있다는 사실은 유사시 남한과의 통일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를 위해 매년 60만톤의 쌀을 2년간 비축하고 2년 후 쌀 가공산업의 원료로 방출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 현행 양곡관리법에 쌀 비축량 120만톤을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 비축 쌀 60만톤 중 40만톤은 MMA 수입쌀 전량을 비축용으로 사용하며 국내 생산 쌀 20만톤을 추가한다.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4,8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도 외교통일 예산 4조 1천억원의 11.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저소득 영세민 복지향상 위한 쌀 쿠폰 무상지원 제도

저소득층의 식량문제를 정부가 책임지는 것은 복지사회의 기본이다. 남한 전체 인구의 7%에 달하는 저소득 영세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에게 필요한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로써 통일 이후 북한 주민의 대다수에 해당하는 저소득 영세민에게 기초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남한의 저소득층에게 1인당 월 10kg의 쌀 쿠폰(120kg/인/년)을 공급하여 쌀과 쌀 가공품(쌀국수, 떡, 햃반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쌀의 양은 연간 42만톤이며, 이를 위한 정부 추가예산은 8,106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2013년도 복지예산 97조4천억원의 0.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 쌀 생산 목표량 상향 조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통일을 대비한 쌀 120톤 비축과 저소득층 쌀 쿠폰 무상지원 제도, 그리고 쌀시장 개방을 대비한 고품질의 완전미 유통과 쌀 가공산업의 정책적 지원 등 적극적인 쌀 수요창출 정책을 펴면 국산 쌀 년 60만톤의

추가수요가 발생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연 480만톤의 쌀이 생산되어야 한다. 2011년도 남한의 논 경지면적은 96만ha였으며 같은 해 10a당 수량은 496kg으로 쌀 476만톤 생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재의 쌀 생산 억제정책과 무계획적인 농지전용 허가 남발을 지양하고, 최소한 2011년도의 논 경지면적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쌀 생산 목표량을 480만톤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 식용 콩 자급 위한 계획 수립

한국인의 전통식단은 기본적으로 쌀밥과 콩반찬(콩나물, 두부, 된장찌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식량안보를 위해서 쌀과 식용콩은 반드시 자급하여야 한다. 남한의 식용콩 수량은 연간 약 40만톤으로 그 자급률이 1990년까지 60% 수준에 달했으나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여 25%를 밑돌고 있다. 이것은 정부의 식용콩 증산 의지의 부족과 저울관세할당물량(TRQ)으로 들어오는 수입 콩의 국내 공급가격을 콩 증산과 연계하여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콩 수입에 의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국산 콩과 수입 콩의 가격 차이에서 오는 이득을 콩 생산자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 통일 후 한반도 전체 식용 콩 수량은 60만톤으로 추정되며, 현재 북한의 옥수수 밭 상당부분을 콩밭으로 전환하면 식용 콩 6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46만ha의 경작지 확보가 가능하다.

● 축산 사료 자급률 향상 위한 정책

남한의 축산 조사료 생산량은 2009년 기준 437

만톤이며 수입량은 84만톤으로 자급률이 84%이다. 배합사료 사용량은 1,665만톤으로 수입 의존율이 75.6%이며, 사료곡물 사용량은 875만톤으로 자급률은 2.1%에 불과하다. 남한의 곡물자급률을 25% 이하로 끌어내리는 주요인이다. 따라서 식량 안보를 위해 축산업의 체질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행 축산업 허가제를 식량안보와 환경 개선을 위한 축산업 허가제로 개정해야 한다. 유럽의 축산업 허가제를 참고하여 농지면적당 사육두수를 적절히 제한하고 조사료와 기초사료 자급을 일정 수준 의무화 하는 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 북한이 초식동물을 위주로 하는 축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통일 후 스위스와 같은 아름다운 농촌을 한반도에 건설하려면 지금부터 합리적인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해야 한다.

### ● 식품산업 육성 정책

식품산업은 식량공급의 주체로서 그 기능이 점차 커지고 있다. 남한의 농림어업 생산에 의한 식량자급률이 열랑기준으로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식품산업이 식량공급의 반을 감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재 남한의 식품산업은 2007/2008년의 세계 곡물파동 이후 계속적으로 고공 행진하는 원료가격 상승과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식품가격 억제정책에 맞물려 채산성이 악화되고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지나친 가격 통제로 인해 품질 열화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며 높아지는 소비자들의 안전요구 수준에 맞추기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유전자변형(GMO)이나 방사선조사(IR)기술 등 신기술에 대한 비과학적

인 반대여론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남한의 식품산업이 통일과 비상시의 식량 확보에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 결론

한반도 통일은 저절로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각 분야에서 각고의 노력이 종합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어렵게 성취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다.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인 자유 민주통일이 되려면 북한 동포들이 보고 함께 살고 싶은 통일 시나리오가 마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통일이 되면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된다는 확신이 서야 우리가 원하는 방식의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확실하고 구체적인 청사진을 남한 정부가 제시해야 한다. ㉞

### 참고문헌

- (1) 이철호, 문헌팔, 김용택, 김세권, 박태균, 권익부, 한반도 통일과 식량안보, 도서출판 식안연 (2012)
- (2) 이철호, 쌀의 자급과 수요창출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제9회 식량안보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4월 16일 (2013)
- (3) 이철호, 통일 식량확보를 위한 정책 제언, 과학기술한림원 원탁토론회-통일을 대비한 우리의 식량정책 이대로 좋은가?, 프레스센터, 6월 11일 (2013)
- (4) 이철호, 녹색성장과 식량안보를 위한 축산업 허가제, 첨단 환경기술, 5호, 32-35 (2012)
- (5) 조지 프리드먼, 넥스트 디케이드, (주)뽀앤파커스 (2011)